

# 2011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

## 여·야 “산재 예방위해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한목소리 최근 현안에 대한 지적 쏟아져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과 저축은행 부실사태, 한강르네상스 사업, 뉴타운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과 정부의 입장 차이로 설전이 계속됐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현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을 쏟아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안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특수업종종사근로자 안전문제, 안전관리제도 문제 등이 그것이다.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을 종합 정리해 봤다.

### 제도 개선 시 공정성 · 공공성 확보해야

올해 국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산안법 개정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고용부와 공



단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고용노동부 국감 현장에서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최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 해오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을 민간지도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강성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율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산업안전 수준이 낮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을 민간지도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이재필 장관은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힘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고용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보니 산업계와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보다 많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그간 나름대로 노·사·정 대표, 학계 등과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터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 사안은 공단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됐다. 공단 국감 현장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민간에 이양하면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측과 지도사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서상에 있는 안전대책이 불이행될 수도 있고,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단 백현기 이사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단 백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안전보건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고용부와 협의해 공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안제도, 이대로는 안돼

올해 국감에서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공단 국감에서 일반 산업기계에 의해 상당수 근로자들이 재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안전성점검 대상 산업기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8년과 2009년 통계를 보면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자 중 약 84%가 안전성 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등 일반 산업기계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재해의 70%가 안전점검이 설치되지 않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의 후진국형 재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EU 국가에서는 모든 기계류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설계 제작 단계부터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고, 일본은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계에 대해 제조자가 생산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크레인, 압력용기 등 11종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일반 산업





기계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백헌기 이사장은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계대상을 11종에서 43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라며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을 수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현행 안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올해 폭발사고가 난 울산의 한 공장의 경우 지난해 공정안전관리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우수 등급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됐다는데 있다”고 공단 국감장에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점검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 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편들에 대해 교육·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백 이사장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학공장의 안전과 관련해 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고용부 국감현장에서 MSDS제도의 관리대상에 위해물질을 추가할 것과 이 제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채필 장관은 “생식독성, 변이원성 물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노출기준도 현실성 있게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MSDS 자체를 사업주 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업자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번 국감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와 공단이 보다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먼저 고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보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건교육, 보건점검 등 사업장 보건관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채필 장관은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대행을 맡기면 모든 것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사

의 주도적인 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지원의 틀을 바꾸고, 보건관리 대행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리는 등 사업장 보건관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역점을 두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공단 국감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건설업 산업재해의 70%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51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 많은 사업장을 다 살펴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아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듣는데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근로자들을 면담해 보면 하나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라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이사장은 "건설재해를 줄이도록 건설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히 규정해야

원청과 하청간의 산재책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가 하청업체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 현재의 제도는 원청의 안전보건 지원, 그리고 원하청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안전관리의 역할 분담과 책임제 등 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장관은 "사내하도급의 재해를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해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산재와 관련해서는 원청기업이 더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노사 각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안전보건 문화의식 개선사업을 늘려나가고 보호 범위도 최대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업종이 제한적인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 촉구

이번 고용부 국감에서는 퀵서비스 근로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고용부가 지난 7월 8일 퀵서비스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발표했다지만,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 가입 방식의 '중





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을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퀵서비스 근로자 이형기씨 역시 "기본생계도 이어 나가지 못하는 퀵서비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없다"면서 "고용부의 실속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동조의 뜻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참고인인 사업자 대표로 나온 박영훈 코리아네트워크 기획이사는 퀵서비스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 여건상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이사는 "근로자라면 일정한 출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분들은 자기들 임의로 출근 여부를 정한다"라며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성격

이 다른 만큼 산재보험 가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이재필 고용부 장관은 향후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점진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기원 및 비파괴 검사자들의 안전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이 의원은 "22,900V의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 곡예 하듯이 일하고 있는 전기원들과 방사선을 이용해서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비파괴 근로자들이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각각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이들 작업이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전기원의 경우 한전이 발주처 개념이며, 비파괴 작업의 경우 용역이 많다는 점을 보면 산안법에 따른 원하청 개념으로도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들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업무의 도급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소관부처가 다르다고 해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종국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책임져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 근로자의 안전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전기원의 안전보건 강화 대책을 보완하고, 비파괴 분야의 경우 굳이 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면 모기업에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안전실태 감독기능 미흡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고용부 국감에서 국내 사업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실태를 고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해 2만8,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4%인 2만3,538개 업체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사실상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산업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

조 의원은 "우리나라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160만개인데, 여기에 이번 적발률을 대입하면 무려 135만개 사업장이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업장의 안전실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감독기능은 매우 미흡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조 의원은 "160만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전국을 통틀어 270여명에 불과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만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약"이라며 "산업 안전 의식이 체화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